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새정부 경제정책방향

저성장 극복과 성장-복지 선순환



PART 01 4대 정책 방향

1

민간중심 역동경제

1

- 01. 규제 혁파·기업활력 제고
- 02. 기업투자 확대·일자리 창출
- 03. 중소·벤처기업 육성
- 04.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2

체질개선 도약경제

5

- 01. 공공·연금 개혁
- 02. 노동시장 개혁
- 03. 교육 개혁
- 04. 금융 혁신
- 05. 서비스산업 혁신

3

미래대비 선도경제

8

- 01. 과학기술·R&D 혁신
- 02. 첨단 전략산업 육성
- 03.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04. 탄소중립·기후위기 대응

4

함께가는 행복경제

12

- 01. 사회안전망 강화
- 02.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
- 03. 복지시스템 고도화
- 04. 지역균형 발전

PART 02 당면 현안 대응

5

민생 안정

16

- 01.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
- 02. 주거 안정

6

리스크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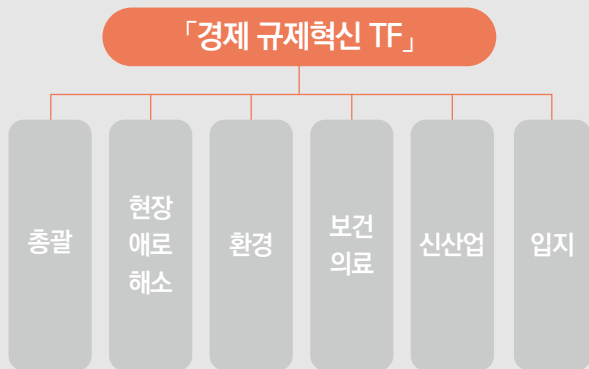
18

- 01. 경제안보 대응
- 02. 위기관리 강화

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·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

☑ 강력한 규제혁신 거버넌스 마련

- ▶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점검·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신설



* 6개 작업반별로 기재부,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 참여
* 팀장 : 경제부총리

☑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



☑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



- ▶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 이전 가능 규제 발굴·이양



- ▶ 덩어리 규제를 발굴, 통합 정비하는 '규제 원샷해결' 도입



- ▶ 「상생혁신펀드」 조성 검토
* 규제혁신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 지원



- ▶ 이해관계자·전문가 참여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신설

☑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 재정비



- ▶ 시설투자·창업 등 입지 규제 개선



- ▶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합리화
* (예)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합리화



- ▶ 경제력집중 감시규제 개선
*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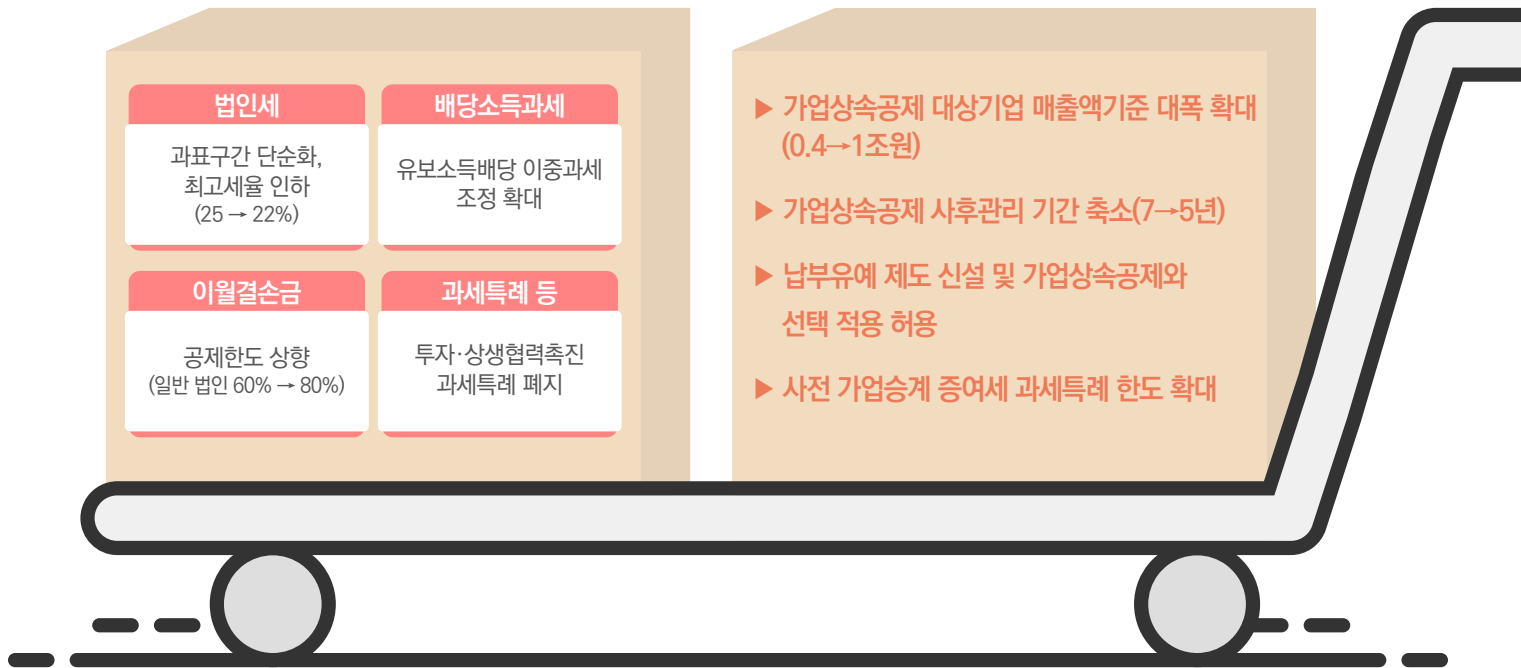


- ▶ 도시 용도지역제 개선
* (예)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'복합용도계획구역' 도입 등

세부담 합리적 재조정, 투자·고용 유인 확대로 민간의 자유·창의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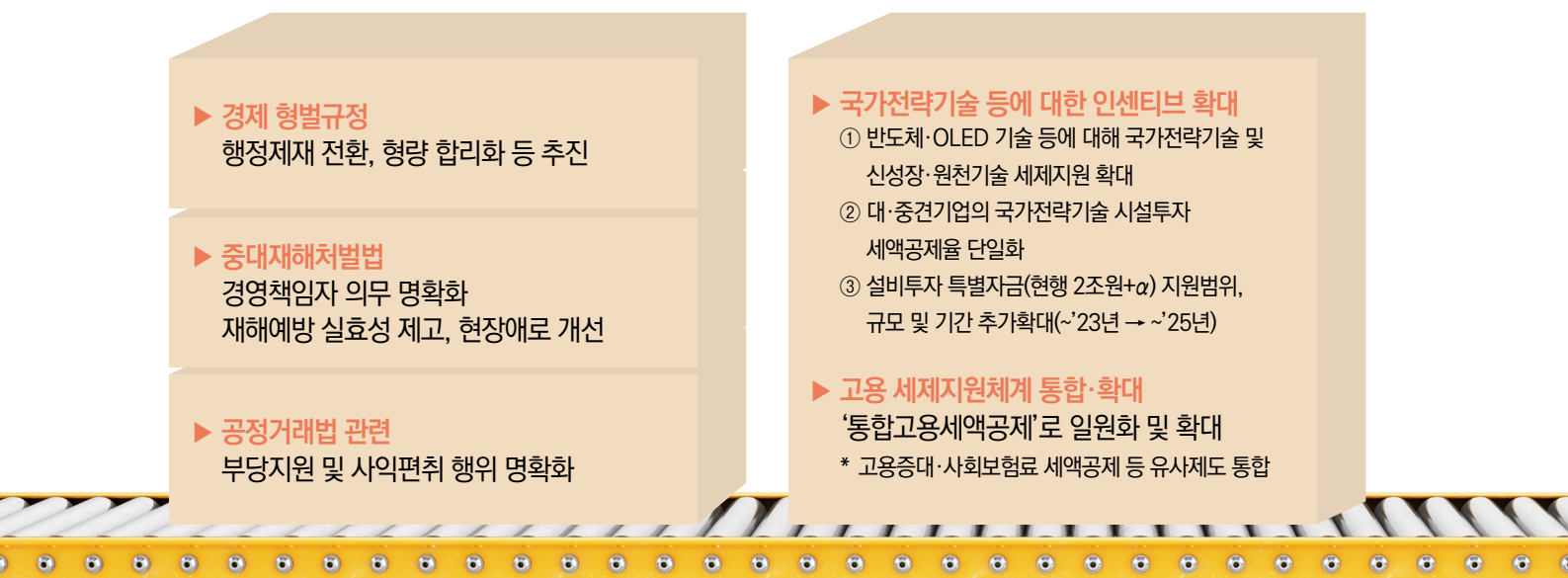
☑ 법인세·배당소득과세 등 부담 완화

☑ 가업승계 활성화



☑ 법적 불확실성 해소

☑ 투자·일자리 창출 인센티브



중소·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

☑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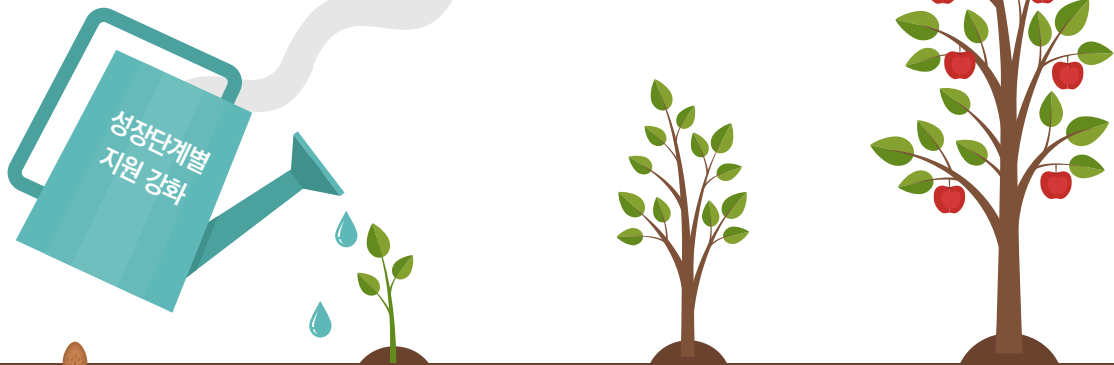
▶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·경쟁력 제고·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

-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·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, 혁신형·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
* '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' 마련('22년 하반기) 및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('22.12월)
- ② R&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

▶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

* (현행) 타업종 전환 + 업종추가시 인정 → (개선) 동일업종 내 신사업 전환 등 인정

☑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



혁신창업	스케일업	투자선순환	글로벌 유니콘 육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'창업중심대학' 확대 ▶ 先민간투자-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프로그램 확대, '가칭'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' 신설('22.3/4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초격차 스타트업'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▶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(5천만원 → 2억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M&A, IPO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 ▶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' 가동 등으로 세계 일류 수준 기업 발굴·육성 ▶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·창업 기업 글로벌화 원스톱 지원
재기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·벤처의 원활한 재도전·재기를 위해 창업자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 검토 			

규제·부담은 완화,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

☑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불공정 행위

- ▶ 지식재산권 남용, 신기술 탈취,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

*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,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

경쟁제한적 규제

- ▶ 진입제한·사업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☑ 플랫폼 경제,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

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·추진

- ▶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, 연동제 시범 운영(22년 하반기)
 - ▶ 조정협의제도 개선,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적 상생 문화 유도 병행
- * (예)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

플랫폼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


- ▶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, 소상공인,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 마련
- ▶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뒷받침
- ▶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 모니터링 병행

재정·공공기관·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


☑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·효율성 제고



건전재정 기초 확립	재정제도 혁신
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, 새로운 재정운용 틀 마련	교육재정교부금, 예타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
* 재정수지·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 설정,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	* 학령인구 감소, 미래인재 육성 등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* SOC·R&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(500 → 1,000억원), 사업별 특수성 및 사회적 편익 반영
성과관리 개편	중장기 재정전략 수립
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의 표준화	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'가칭'재정비전 2050' 수립·추진
* 5개년 단위 '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'에 구체화 예정 ('22.7월)	



기능·인력 조정	자발적 혁신유도
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기능·인력 재조정 추진	공공기관 스스로 업무·인력 재조정 및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
재무건전성 확보	직무 성과 중심 전환
高 재무위험기관*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	보수·인사·조직 관리를 연공서열에서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전환
* 사업·재무위험 등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10여개 선정	



공적연금 개편	사적연금 활성화	건보료 개편
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('23년 하반기) 및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개혁 논의 추진	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·퇴직연금의 가입률·수익률 제고 유도	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('22년 하반기)
*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수익성 제고	*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(700 → 900만원)	*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(최대 1,350만원 → 일괄 5,000만원)

체질개선 도약경제 노동시장 개혁

02

경직적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환경 급변에 탄력 대응 * '22.6월중 추진방안 확정·발표

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

- ▶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, 현장애로와 시대흐름에 맞게 조정
- ▶ 주 52시간 틀 속에서 운영방법·이행수단 개선
 - *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,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
- ▶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('22년 하반기) 및 개정법안 국회 제출

직무·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·확산

- ▶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
 - * (현행) 직업 분류별 임금정보
(개선) 직무별 업무·기술·지식 및 임금정보 제공
- ▶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맞춤형 합리적 임금·평가 체계 도입 지원
 - *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세부 추진방안 마련('22년 하반기)



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논의 추진

- ▶ 경사노위 내에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,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

체질개선 도약경제 교육 개혁

03

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
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

대학교육 혁신·자율성 강화

대학규제 혁파

- ▶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제개선 착수 및 첨단분야 정원 확대 대책 마련('22년 하반기)
- ▶ 획일적 대학평가를先 재정지원 - 後 성과관리로 개편

재정여건 개선

- ▶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
- ▶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등 자율성 강화

지역·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

- ▶ 지방(전문)대,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·교육과정 등 개편
 - * (지방대)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 주도
 - * (전문대)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등
 - * (직업계고) 권역별 AI·SW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등
- ▶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 구축 및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 마련
 - *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
 -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·전망 고도화 병행

디지털 혁신·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,
금융신평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·제도 재정비



디지털 혁신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

- ▶ '가칭, 신설)금융규제개혁 TF'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, 빅테크, 기후변화 등 대응 금융안정·혁신과제 발굴·추진
- ▶ 「디지털자산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성장 환경 조성
- ▶ 정책금융의 민간 중복 최소화 등 역할 재정립
- ▶ 예대금리차 비교공시('22.3/4) 등 추진

자본시장 활성화, 외환시장 선진화

- ▶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
*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,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, 규제혁파 등
- ▶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,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*,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(0.23 → 0.20%)
*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
- ▶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소재 은행·증권사 등의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
* 런던장 마감 고려, 1단계 새벽 2시 →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

과감한 규제혁신,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

규제 합리화

- ▶ 콘텐츠, 관광,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전수조사·유연화
- ▶ '경제 규제혁신 TF'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·추진
* (예)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,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·제도기반 마련 등

육성 기반 마련

- ▶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원점 재검토·입법 추진
- ▶ 법령정비, 통계구축 등 서비스 수출 지원
- ▶ 민간 R&D 인센티브 제고, 유망서비스업 중심 정부 R&D 확대

제조업-서비스업 차별 해소

- ▶ 고용·투자·창업 등 세제지원 차별 해소, 신성장서비스업(OTT 등) 세제지원 확대
- ▶ 유망서비스업 정책금융 확대,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 검토
- ▶ 지식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검토
- ▶ 산단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

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·지원

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

- ▶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
- ▶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

R&D 재구조화

- ▶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, 초격차 기술확보 등에 R&D 중점투자
- ▶ R&D 예타 대상 사업 규모 확대(현행 500억 → 1,000억원)
- ▶ R&D Fast-Track 허용
- ▶ R&D 평가시스템 개선
 - * 실증, 사업화 실적을 성과 지표로 개발·적용하고, 국제기준에 맞춰 평가시스템을 개선
- ▶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「국제협력 R&D 프로젝트」 추진
 - * 달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, 양자정보 과학,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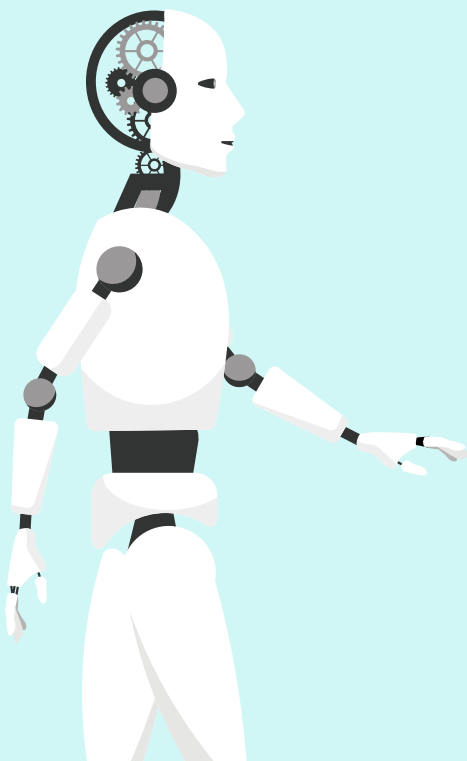


기술사업화 촉진

- ▶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, 초격차 스타트업 1,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기반 창업촉진
- ▶ 스케일업 투자펀드, 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도입
- ▶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
 - * 연구성과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, 제품판로까지 지원

국제표준화

- ▶ 5G·6G·미래차등 표준특허 확보 지원
- ▶ R&D 성과물 국제표준화 지원



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

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

- ▶ 국가적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
신산업 육성전략 마련·추진
- ▶ 경제안보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」 수립
 - * 반도체 등 기술·생산역량 확충, 기업성장 지원
 - * 연내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상정

첨단산업 초격차 확보

- ▶ 인프라 구축,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지원 강화
- ▶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 지정, 정원 확대방안 마련
- ▶ 산업생태계 공고화
 - * 수요연계 협력모델 발굴, 원천기술 R&D 지원, 국제협력 강화
- ▶ 산·학·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
R&D·인력양성 연계 강화

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

- ▶ 차세대 AI -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
 - *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,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실증,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등
- ▶ 바이오, 자율형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- ▶ 정책금융,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K-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
- ▶ 데이터·자동화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농업 확산·고도화

원전 경쟁력 강화

- ▶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로
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
- ▶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기술 개발
 - * 독자 소형 원자로(SMR), 원전연계 수소생산 기술개발
- ▶ 원전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
 - * '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

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,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비 확충

경제활동인구 확충

- ▶ 여성·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
 - * 계속고용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
- ▶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
 - *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, 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
- ▶ 전국민 평생 역량개발 방안 수립
- ▶ 일터-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

축소·고령사회 대비

- ▶ 첨단기술중심 병력구조 개편
- ▶ 로봇, IoT,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 육성
- ▶ 의료·돌봄·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
 - * 재택의료센터 확산, 지역의료·돌봄 체계 연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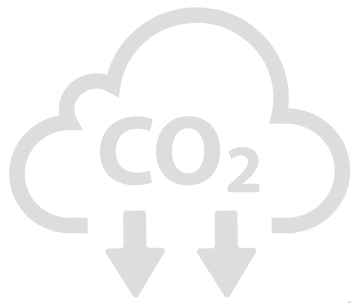
저출산 대응

- ▶ 육아·출산 인센티브 강화
 - *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, 3+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
- ▶ 국가 돌봄책임 강화
 - *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, 방과후 학교 확대
- ▶ 육아휴직·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
 - * 육아휴직 기존 1년 → 1.5년 확대

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

- ▶ 4대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 인구문제 대응
 - * 경제활동인구 확충, 축소사회 대비, 고령사회 대비, 저출산 대응
- ▶ 부처·연구기관·민간전문가 참여 인구위기대응TF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추진

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을 재검토하여 기 발표한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



보다 효율적인 감축경로 · 이행수단 검토

- ▶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
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
 - ▶ 배출권 총량 및 할당방식 재검토 등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제고
 - ▶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에너지 믹스 합리적 재조정
- *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조속 재개,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운전 등

저탄소 투자·소비 촉진

- ▶ 탄소중립 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·금융 지원 강화
- ▶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
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
- ▶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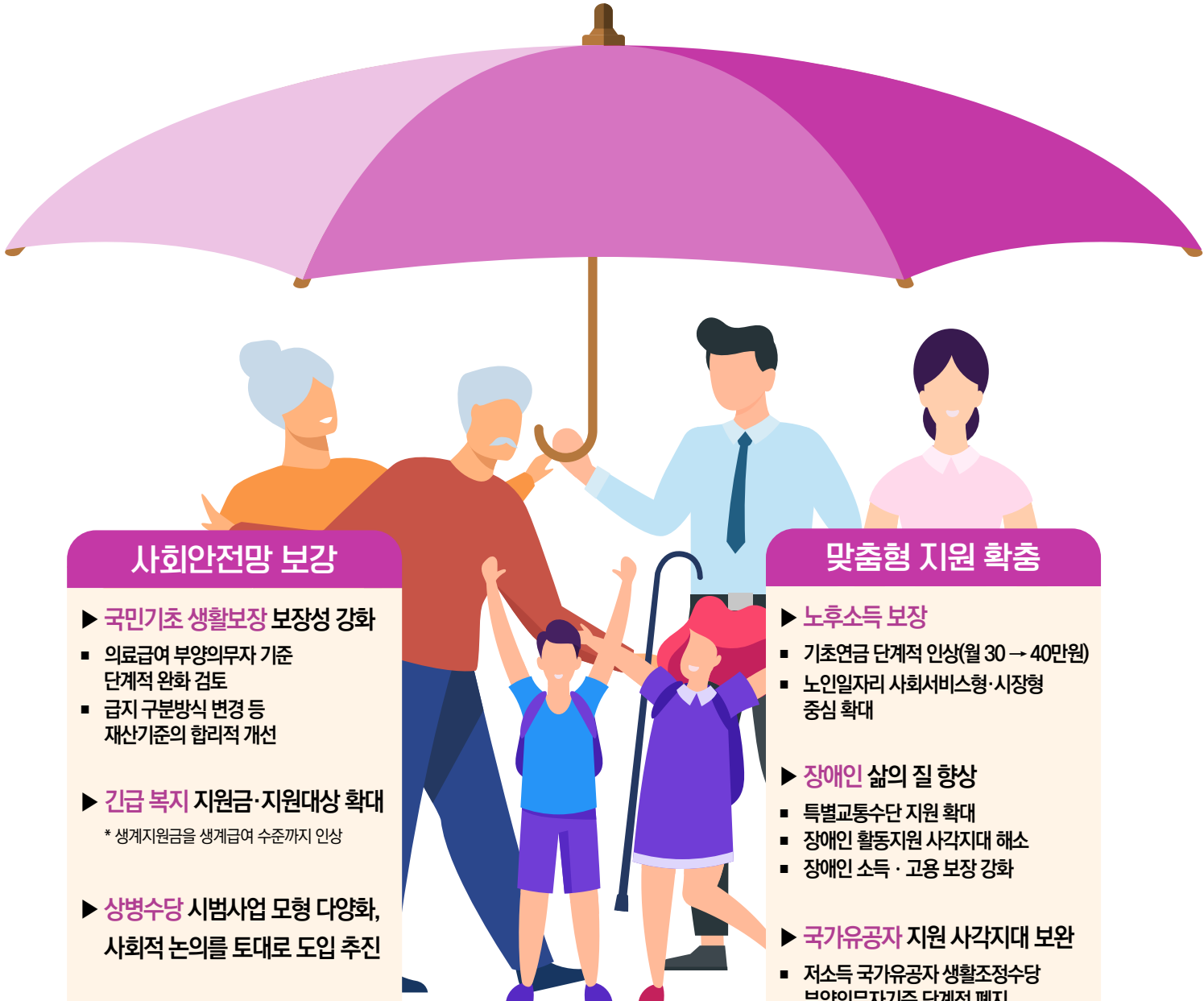
순환경제, ESG 생태계 조성

- ▶ 폐플라스틱,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
- *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,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
- ▶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
- *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(7월),
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내제도 정비,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

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

01

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
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



사회안전망 보강

- ▶ **국민기초 생활보장** 보장성 강화
 -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
 - 급지 구분방식 변경 등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
- ▶ **긴급 복지** 지원금·지원대상 확대
 - *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
- ▶ **상병수당** 시범사업 모형 다양화,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도입 추진
- ▶ **재난적 의료비** 지원 대상·범위·한도 확대
 - * (기준)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% → 10% 초과 (범위) 6대 중증질환 → 모든 질환 (한도) 1인당 연 3천만원 → 5천만원
- ▶ **고용보험**
 -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 추진
 -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

주거복지 지원 강화

- ▶ **「주거복지 혁신방안」** 마련
 - * 시장소통, 민관협력, 계층·지역별 맞춤형 복지
- ▶ 살고 싶은 **공공임대주택** 50만호 공급
 - * 생활 SOC 결합,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로 질적 수준 제고

맞춤형 지원 확충

- ▶ **노후소득 보장**
 -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(월 30 → 40만원)
 -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중심 확대
- ▶ **장애인** 삶의 질 향상
 -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
 -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
 - 장애인 소득·고용 보장 강화
- ▶ **국가유공자** 지원 사각지대 보완
 -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
 -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
- ▶ **보호아동** 국가책임 강화
 - 학대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대
 - 신고의무자, 대응인력 교육 강화
- ▶ **한부모가족** 보호강화
 -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
 - *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2% → 63% 이하로 확대

근로자·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

공정한 기회보장 ·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

☑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

퇴직소득세 부담 경감

- ▶ 근속연수공제 확대하여 퇴직자 세부담 대폭 완화

*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

10년 근속

50% 경감

20년 근속

100% 경감

국민취업 지원제도 개편

구직촉진 수당

가구특성 고려 차등지원

취업성공 수당

계획-실제 취업 반영한 개편 검토

조기취업 성공수당

빠르게 취업할수록 많이 받도록 개편

근로장려세제 확대

- ▶ 재산요건 완화(2 → 2.4억원)
- ▶ 최대지급액 10% 수준 인상

* (현행) 단독가구 150만원,
 홑벌이가구 260만원,
 맞벌이가구 300만원

☑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

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

- ▶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(~'23년)
- ▶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 확대

현행

청년 재직자·구직자,
 중장년 구직자

개선

중장년 재직자 포함
 (7월)

맞춤형 취업·채용 지원

구직자
 도약보장 패키지

* 개인별 경력개발
 로드맵 수립, 훈련·취업
 알선 연계 지원

+

기업
 도약보장 패키지

* 맞춤형 인사·노무
 컨설팅, 인프라·
 환경개선 통합지원

☑ 청년에게 일자리 · 주거 · 교육 · 자산형성 기회제공 확대

공정한 취업기회 보장

- ▶ 「공정채용법」 입법
- ▶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
- ▶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지원
- ▶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

맞춤형 지원 확대

- ▶ 청년도약 프로젝트 추진
 - * 대학생 학년별 맞춤형 고용 지원, 일경험 프로그램,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
- ▶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
 - *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, 추첨제 확대,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
- ▶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
 - * 저금리 유지, 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

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

선제적 서비스 제공

▶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전국민 확대

* 개인·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
홈페이지·문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

중복·사각지대 해소

▶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

* 중앙부처-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,
사후평가 강화 등

민간 참여 확대

▶ 사회서비스 민간투자 활성화

▶ 사회서비스 공급자 규모화·다변화 지원

*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
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등

사회서비스 시장 확대

▶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·실증

▶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

인프라 보강

▶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보강

*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, 정보 플랫폼 제공

▶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

*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활용

분야별 전달체계 개선

▶ 평생학습·직업능력개발 사업간 전달 체계 정비 및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

▶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확대



지방 경쟁력 제고 등으로 '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' 실현

지방경쟁력 강화

▶ 지역 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

* 신산업 생태계 육성·인재양성 등
권역별 맞춤형 지원

▶ 신규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고유 자산 활용한
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

자생적 균형발전 도모

▶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▶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
지역투자 확충 및 낙후지원 지원 강화

* 지역균형발전 목적 보조사업의 균특회계 이관,
인구감소지역 포괄보조사업 낙후도 비중 상향 등

지방소멸위기 대응

▶ 인구감소지역에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 지원

보육	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
교육	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
의료	방문진료사업 지원 등
주거	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

▶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
지방생활인프라 개선

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

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

유류비 등



- ▶ 유류세 30%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('22.8.1.~'22.12.31.)
- ▶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(~'22년말)
- ▶ 발전용 LNG·유연탄
개별소비세 15% 한시 인하('22.8.1 ~ '22.12.31.)

주거비



- ▶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
- ▶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▶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및
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('22년말 → '24년말)

통신비



- ▶ 어르신·청년 특성에 맞는
5G 요금제 출시 유도

교통비



- ▶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

양육비



- ▶ 기저귀·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

수급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

- ▶ 물가 관련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
- ▶ 주요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,
예산 이·전용 등 추가 조치
- ▶ 「농수산물품 물가안정 대응반」 설치
* 수급동향 일일 모니터링, 가격불안 포착시 신속 대응

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 강화

- ▶ HACCP 심사 수수료 감면(30%) 연장 추진
- ▶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지속
* 23년 예산 편성 시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반영
- ▶ 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
- ▶ 주요 곡물·수산물 비축 확대 및 수입 곡물 전용 비축시설 추가

소상공인, 자영업자 지원

부담 완화

- ▶ 국유재산,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
6개월 연장(~'22.12월)
- ▶ 고용보험료·산재보험료
납부 유예(7~9월분)

계약 특례

- ▶ 국가·지자체 계약시
한시 특례 연장(~'22.12월)
* 절차 간소화, 입찰보증금 경감(2.5%p),
대가 신속지급(5~3일) 등

경쟁력 강화

- ▶ 코로나회복·도약을 위한
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('22.3/4)
* 디지털 전환,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

주택공급 확대,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

부동산 시장 정상화

공급 확대



- ▶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('22.6월)
- ▶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('22.3/4)

전월세 시장 안정화



- ▶ 건설형 공공임대(약 3만호), 매입임대(약 1만호), 전세임대(약 2만호) 등 적기 공급
- ▶ 계약갱신청구권 도래 이전 전월세 시장 선제 대응 방안 마련

금융 지원



- ▶ 생애최초 LTV 완화(80%), 대출한도 확대(6억원)
- ▶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('22.3/4)
- ▶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규제 보완
- ▶ 고금리·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·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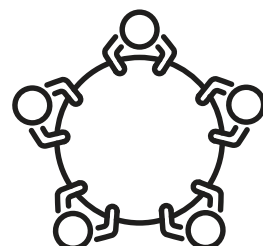
세제 개편



- ▶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(1년),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1 → 2년으로 확대
- ▶ 보유세 부담 경감방안 보완
 - * (재산세)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(60 → 45%)
 - * (종부세)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(100 → 60%),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(3억원) '22년 한시 도입
- ▶ 종부세 관련 고령·장기보유 납부유예, 일시적 2주택·상속 주택 등 주택수 산정 제외
- ▶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 확정('22.7월)

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

- ▶ 「부동산 관계장관회의」 신설
 - * 경제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
 - *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, 시장소통,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
- ▶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, 부문별 3분기 시행 정상화 과제발표('22.6월)



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



☑ 경제안보 종합대응 추진기반 마련

위기대응 체계 강화

- ▶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, 상시 위기경보체계 구축

공급망 관리·지원기반 구축

- ▶ 공급망 3법 제·개정,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원수단 마련
- * 공급망 기본법, 소부장 특별법, 자원안보특별법

국제협력 강화

- ▶ 경제안보,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 협력체계 강화
- * IPEF, 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 적극 참여

☑ 해외자원확보 및 유턴·외투기업 지원

해외자원확보

- ▶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·공공기관 지원 확대
- *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 및 실패 시 감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

식량안보 강화

- ▶ 기초식량(밀·콩 등)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 및 해외공급망 확보 추진

유턴기업

- ▶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
- *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, 국내사업장 유희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 검토
- ▶ 첨단산업·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 확대
- * 기존 지역중심 투자금 지원을 첨단·신기술 등 업종중심으로 변경해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검토

외국인투자

- ▶ 국가전략기술, 탄소중립, 공급망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- * (국가전략기술) 현금지원 최대한도(50%) 적용 및 국비 부담률 상향 (수도권 40 → 50%, 비수도권 70 → 80%)
- ** (공급망) 주요 탄소중립·공급망 기여투자 한도 산정시 최대 10% 추가지원

거시경제 및 가계·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·안정적으로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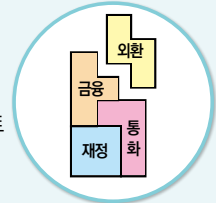
☑ 정책공조 기반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마련

- ▶ 거시·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-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 및 적기 대응
- ▶ 기재부 내 '비상경제대응 TF' 운영
→ 대내외 거시·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
- ▶ 거시경제금융회의,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즉각적 조치 마련



☑ 거시경제 여건·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 고려한 정책조합 추진

- ▶ **(재정)** 코로나 피해극복 자금공급의 재원조달 다양화
* 지출 구조조정, 세계잉여금, 기금 여유자금 등 기존재원 활용
- ▶ **(통화)**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
- ▶ **(금융)**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 및 제2금융권 모니터링 강화
- ▶ **(외환)** 외채 등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
*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개선검토



☑ 가계·자영업자 부채 연착륙, 재기 지원

- ▶ 유예원리금 상환 컨설팅 제공, 상환계획 수립
- ▶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·융자 공급 (8.7조원)
- ▶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운영(30조원)
- ▶ 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자금 지원 추진(42조원)



☑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

- ▶ 신용위험평가 운용 내실화를 통해 시장의 기업위험평가·구조조정 원활화
* 향후,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
- ▶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 추진
* 정책금융기관 출자, 민간자금 매칭 → 필요시 재정투입 추가 검토

